

2002년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글 · 강윤구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사회”이다. 21세기가 되었어도 이러한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50년대 전후복구 시대를 거쳐 60~70년대 경제개발에 매진하던 시기에는 가치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함께 열심이 노력한 결과,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틀이 완성되었다. 기본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큰 물줄기는 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렵사리 갖춘 소중한 제도의 틀을 잘 가꾸고 꽃을 피워 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난 50년간의 성과와 반성

올해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해방이후부터 60년대 후반까지 보건복지행정은 방역과 구호위주의 행정이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이 '61년 인구 10만명당 198명(2000년은 24.4명)이나 되었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마마, 페스트, 발진티푸스 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결핵은 지금은 좋은 약이 있어서 거의 낫는 질병이지만 그때는 약도 구할 수 없었고 병원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이 늘 우리와 함께 했다.

영아사망율이 2000년에 7.7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과거에는 홍역을 앓은 다음에

야 출생신고를 할 정도로 높았다. 2000년에 75세 인 평균수명은 1950년에는 50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보건복지제도의 기초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의료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등 보건의료관련법률을 50년대에 제정하고,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사회보장예관법률 등 사회복지관련법률도 60년대 초에 정비하였다.

특히 '61년부터 추진한 「가족계획사업」은 보건복지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뒷받침이 되었다.

'70년대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OECD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의료시설·장비의 확충을 도모하고 '81년부터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지소 등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료시설·인력의 지속적인 확충과 그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70년대 후반부터 의료보장체계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보험은 단계적인 확대과정을 거쳐 '89년 7월 도시지역에까지 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 도입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하게 되었다.

'80~'90년대는 사회복지·보장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시기였다. '81년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거쳐 '83년 사회복지관 설치, '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와함께 '89년 전국민 의료보험과 '99년 전국민연금 실시로 사회보장체

계의 기본틀을 완성하였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분야의 주요개혁을 추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완성하는 한편, 오랜기간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휴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 개혁의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개혁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하고, 다가올 새로운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1세기 보건복지환경 전망

21세기에는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등 생활양식의 변화로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 될 것이다.

우선,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4%(354만명)인데, 2020년에 13.2%(690만명), 2030년에는 19.3%(1,017만명)로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안정, 의료보장, 일거리 마련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위해 요인이 변화될 것이다. 종래의 전염병 보다는 뇌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과 병원균 변종, 신종 전염병 등이 주요 보건의료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한편,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보건의료시장 개방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의료 바이오산업(BT) 진흥과 관련, 세계 각국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세기 보건복지 비전과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보건복지의 바람직한 모습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과 평생건강이 보살펴지고,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동시에,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 건강하고 잘 사는 사회이다.

2010년 우리 미래의 모습을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수명은 77세(건강수명은 72세)로 증가할 것이며, 영아사망율은 1천명당 48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며, 국민연금 수혜자는 약 300만명 수준에 도달하여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002년 보건복지 정책방향

2002년에는 지금까지 착실히 다져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보호에 힘쓰는 한편,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더욱 성숙·발전시켜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155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생계·주거·교육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지난해 1인당 월평균 182천원에서 올해는 204천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강화를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시범사업 확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보급, 자활사업기반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을 확대(5→20개소)하는 등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 자립자금 융자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영업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영아·장애아 등 특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확충(72→109개소)하여 보호토록 하는 한편, 현행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을 확대(92→110천명, 월 45→50천원) 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하고,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개인별 자원봉사 실적 D/B화, 인센티브 부여 등 '인정과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셋째, 질병·장애·노령·사망 등 어떤 사회적 위험이 닥쳐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이라 할 것이다. 20세기 선진국에서 발전한 사회보험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98년 IMF의 캄드쉬 총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안되어 있다니 하고 매우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당시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그 이후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외형적인 4대 사회보험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재정의 안정문제, 보험료 부과와 형평성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어민, 도시 자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대상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전국민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고, 공·사연금간 연계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 근본대책 추진

건강보험제도는 최근 재정안정의 위기라는 시련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속된 수입·지출 불균형의 구조적 요인이다.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2006년까지 재정안정기조를 회복하되,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의료수준 향상 노력

국민 보건 의료수준이 한단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보건의료 인력·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의료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의사나 병원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선진 외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 전염병 퇴치 노력,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국민건강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시설의 분포, 의료장비 활용 등에 있어서 질적 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국민의료비 부담이 경제수준에 비해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의료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보건사업 미활성화, 응급의료·국가 방역체계 등 비상시 대비 보건의료시스템의 취약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흡연, 음주 등 건강 위해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국민 조기 암검진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소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종합센터'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제고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시설의 적정총량을 유지하고, 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해 개방형 병원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의료 분쟁조정법 제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자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분업은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여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환자사망율과 장애율을 낮추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장비의 대폭 보강, 응급의료 연락체계 강화 및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예비병상과 전문 의료진 확보를 추진하고, 2003년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구조사를 각각 290명, 8,200명 수준으로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물테러 등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전염병 감시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시·도단위의 실험실 진단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건산업 육성 진흥

아울러, 보건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전통 한방의료의 발전을 통해 양·한방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투자 효율성이 높은 보건의료 유전체 연구, 생명공학, 뇌의약학 등 전략품목에 연구개발비를 집중지원(810억원)하고, 2006년까지 충북 오송지역에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개발·생산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첨단 과학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총 7조 7,101억원의 예산(일반회계)을 편성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예산규모인 3조 1,127억원에 비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사회보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 등이 예상되므로, 경제수준에 걸맞는 사회보장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2